

보톡스 균주전쟁, 메디톡스 승리... 주름살 낫 대응

ITC “대응계약 나보다, 관세법 위반
美시장 배척, 10년 수입금지 판결”

메디톡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대응계약, 이의절차 진행하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응계약이 4년여간 이어온 보툴리눔 독신(이하 보톡스) 균주 원조 논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이 메디톡스임을 인정 한 셈이다.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해 출시한 ‘나보다’의 판매는 앞으로 10년간 금지됐고, 메디톡스는 벼랑 끝에서 회생 기회를 얻었다.

◆“대응계약, 균주 훔쳤다”

7일 메디톡스와 대응계약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에서 진행된 예비 판결에서 “대응계약의 나보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응 계약을 ‘영업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응계약이 자사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스의 원료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다

메디톡스-대응계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Medytox	*보툴리눔 독신 제제	대응계약 나보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대응계약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 영업비밀 침해	주장 내용	자체 개발한 제품, 경쟁사의 음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보툴리눔 균주 원료): '보톡스'로 불리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		
2016년 6월	메디톡스, 미국에서 대응계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독신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	
2016년 10월	메디톡스, 서울중앙지법에 대응계약 상대 소송 제기	
2019년 1월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응계약 제소	
2019년 3월	미 ITC 공식조사 착수	
202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2020년 6월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2020년 7월 7일	미 ITC,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2020년 11월	미 ITC 최종판결 예정	

를 제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나보다의 대응계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톡스 제제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발매되면서 국내 보톡스 제제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영

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 판결은 반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국내 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대응계약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

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응계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다 행보 가로막히나

ITC가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대응계약이 입을 상처는 크다. 나보다의 미국 판매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다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대응계약은 지난해 5월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10월에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허가를 받아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대응계약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는 186억원을 판매하며 매출 성장에 큰 기대를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균주 도용과 같은 상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취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메디톡스는 판매금지 및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나보다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막을 수 있

다”고 내다봤다.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에서도 앨러간과 함께 대응계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는 대응계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의 고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이 메디톡스의 40%를 차지하고, 소송 비용으로 인한 피해도 컸던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대응계약은 ITC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대응계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ITC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oul.co.kr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담회' 참석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최저임금 “2.1% 삭감” vs “16.4% 인상”

(중단협)

(노동계)

중단협 “중소, 생존위한 사투 중
기업·근로자 위해 최소한 동결해야”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범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을, 소상공인업계는 ‘인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사용자단체에 포함된 이들은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590원보다 2.1% 낮춘 841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많은 8590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올랐

고, 최저임금이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비용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인건비가 월 223만원에 달하는 등 임금을 주는 쪽 부담이 너무 높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으로 5월 현재 중소기업계 고용률은 66.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지급 여력이 최악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여력만 된다면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최고 고시 기한이 8월 5일 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은성수 “망 분리 등 보안규제 단계적 검토”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
“일상적 위기관리 가능하도록
금융인프라기관에 BCP 적용”

“금융사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사의 업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사의 망분리는 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용 외부 망으로 분리하는 금융 보안 규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밖에서는 금융사 내부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있지만 불분명한 규제를 검토해 임직원이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이날 중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강화하고 한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 내부통제 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사이버 공격,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전환 성공

한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

지난달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흑자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

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흑자다. 지난 4월의 33억300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51억8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품수지 흑자는 25억 달러다. 4월보다는 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흑

자폭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가장 심했다가 5월 들어 조금씩 풀렸다”며 “상품수지가 4월보다 나아질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출 345억5000만 달러, 수입 320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28.2%, 24.8%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